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2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2.10.)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0일(목)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

-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22. 2. 10.(목) 14:00

- 회의 방식: 비대면 영상회의

- 위원
 -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당연직 위원(8명):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 위촉직 위원(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6명

■ 상정 안건: 3건

- [보고안건]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사항
- [보고안건]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결과
- [보고안건] 중앙센터 2022년 노후준비 사업계획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2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2.2.10.

II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2022년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였다.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개정 사항〉

복지부 표준모델*	서비스 대상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일부 지역 제외),
-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증재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신규 추진한다.
- 또한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하여 시행 지역을 확대하였다.

■ 한편,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한다.

-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되어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목록 > 중앙부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사업별 소개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22년 신규 6개 서비스 모델 발굴, 총 24개 서비스, 77개 시·군·구를 대상(중복포함)으로 시행 지역 확대

〈'22년 신규 사회서비스 현황(시·도별 서비스 제공 계획 발췌)〉

구분	서비스명	시행 시·군·구		비고
		기존	확대	
서울	임산부 가사 지원서비스(신규)	-	24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8	11	
경기	아동·청소년 동물매개 심리지원(신규)	-	1	수원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신규)	-	3	안산·시흥·양평
	통합가족상담서비스	11	12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1	2	

구분	서비스명	시행 시·군·구		비고
		기존	확대	
	산모상담지원서비스	4	7	
	식사·영양관리서비스	1	4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23	26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1	6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	4	
충남	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 재활서비스(신규)	-	1	천안
전북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 정신건강 통합서비스(신규)	-	1	정읍
	바른체형기성장운동서비스	4	5	
	건강두드림서비스	6	7	
	성인심리지원서비스	8	10	
전남	남도소리 남도아이	11	12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14	15	
	성인심리지원서비스	4	7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9	10	
경북	식사·영양관리서비스	-	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3	14	
	편편스터디	6	7	
경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3	14	
대전	식사·영양관리서비스	-	5	
광주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신규)	-	2	북구·광산구
	바른체형기성장운동서비스	5	6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지원서비스 "톡톡톡 또래숲"	2	3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3	5	
	노인 두뇌건강 지원서비스	6	7	

■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확대(19건)

시도	서비스명	소득기준*	
		변경전	변경후
전국 공통**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20	140
충남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50	160
	아동청소년정서발달	120	14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120	140
	정신건강토달케어	120	소득기준 없음
	아동청소년건강형태 개선	120	140
	셀프자세교정	140	150
	우리가족추억만들기	120	140

시도	서비스명	소득기준*	
		변경전	변경후
	슬기로운 영양생활	150	160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사랑만들기	120	150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170	소득기준 없음
경북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120	소득기준 없음
울산	영육아발달지원	150	160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50	160
	임신부생활건강지원	120	소득기준 없음
	성인(청년) 심리지원	150	160
강원	강원행복한도민심리지원	140	160
	노인·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140	160
인천	시각장애인인마서비스	140	150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기준 상한

** 전국 공통 모델 시행 지역: 서울, 충북, 전남, 경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24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2.2.15.

Ⅲ	<p>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p> <p>- 과거 한센인 피해사건 생존 피해자 392명, 올 1월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21) -</p>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 차관)를 2월 21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16년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 2009~2013년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 발굴 〉

(신고 기간) 2009.3월부터 6차례 신고 기간 연장하여 2013.4월까지(4년간) 시행

(조사 결과) 14개의 피해사건을 인정하고, 10,038건 신고·접수 후 6,462명을 피해자로 인정, 256건 불인정, 3,320건 반려(위원회 19회 개최)

(조사 종료) 더 이상의 피해 신고가 없어 위원회(1, 2기) 활동 종료(2013.7.31)

■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36건이 접수되었다.

* 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 위탁 공모를 통해 한센복지협회에 위탁

** 한센인 관련 단체와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신고 접수 독려

○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하여,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 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 접수 → 피해조사(본인·보증인 방문면담) → 실무위원회('21.12.29) → 본위원회 의결('22.2.21)

-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 지급대상자 모두 2022년 1월부터 지급받게 됨.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하였다.

* ('12년) 기초·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 ('16년) 피해자 전체 월 15만 원 → ('20년) 월 17만 원

참고 1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개요

■ 위원회 기능 및 근거

- (기능)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법적근거)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22.2.21.(월) 13:30, 비대면 영상회의
- (구성) 복지부 제2차관(위원장), 법무부·행안부 등 국장급, 한센복지협회 및 한센총연합회 회장 등 총 16인(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 (안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심사·결정(안)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는 2009~2013년 위원회 심사·결정하였으나 당시 신고하지 않은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 및 조사 실시(총 436건 접수)

* 한센인사건법 개정('16.3)으로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기초·차상위 → 모든 한센인피해자) 이후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결정('20년 실무위원회 의결)

■ 향후 계획

- 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에게 결정통지서 송부 및 위로지원금 지급(2022년 1월분부터 지급), 결과보고서 작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25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2.2.21.

IV

대한민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우뚝 서다

-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한국 선정 -
- 전 세계 백신 공급 불평등 해소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기대 -
- 복지부, 올해 중·저소득국 370명에게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본교육 -

-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3일(수) 23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이하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선정 행사”(온라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을 WHO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WHO 인력 양성 허브」 공고(‘21.11.12), 참여 의향서 제출(‘21.12.10)

- WHO 인력 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training hub)이다.

-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 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WHO는 한국을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유로 국내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연간 60만 리터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한국은 5종*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경험이 있고,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임상3상 진행 중)도 진행 중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모더나, 자이코브-디

- 나아가, 교육시설 인프라로 국내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WHO 인력 양성 허브 일부 활용 예정), 향후 글로벌 인력양성 전담 훈련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내 인력대상 바이오 제조공정분야 교육을 위해 공공자금으로 설립한 교육장 (현재 2개소) 송도 한국형 NIBRT 교육장, 오송 K-Bio 교육장 (추가 2개소) 안동 동물세포 실증센터 교육장(23), 화순 의약품 품질관리 교육장(23)

- 더불어, 한국은 이번 WHO 인력양성 허브 신청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였다.

〈 현재 WHO 인력 양성 허브 민·관파트너십 참여 기관 〉

- (글로벌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한미약품, 씨이티바, 싸토리우스
- (국제기구 등) 국제백신연구소, 라이트펀드(RIGHT FUND)
-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트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정부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해외기관) IDB(미주개발은행), PAVM(아프리카백신생산연합), 남아공 Biovac社

- 이번 한국의 WHO 인력 양성 허브 선정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국회·정부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낸 성과이다.
 -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회담('21.5.21)을 계기로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를 갖추고 국산백신 신속개발과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등을 추진* 해 왔다.
 -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체계 구축,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 임상 3상 지원, 원부자재 수급 등 백신 위탁생산 지원, 국내(6.3조원)·외(3.5억불) 기업투자 유인 등
 - 국회의장(박병석)은 WHO 사무총장 면담('21.11.23, 제네바) 등을 통해 한국의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요청하였고, 국무총리(김부겸)는 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는 서한을 송부('21.12.113) 한 바 있다.
 - 외교부는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회의(SED)'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 계기마다 우리나라의 허브 선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 한국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370명에 대한 백신·바이오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310명은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본 이론교육(2주 100명)과 글로벌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기본교육(3주 210명)을 받을 예정이다.
 - 60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개도국 백신생산을 인력 대상으로 바이오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고, 교육비용은 ADB가 부담 할 예정이다.

- 이번 한국의 WHO 인력 양성 허브 선정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바이오 분야 성장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더불어 WHO 인력 양성 허브는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청년들이 WHO 허브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전체 인원의 약20% 배정)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교육을 접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22년은 국외 370명+국내 150명 예정, 향후 전체 인력의 20%는 국내 인력 배정 계획
 - 한국이 인력양성의 중심지(메카)가 됨으로써 세계적 기업들의 생산 설비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생산 현장 견학 등으로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나아가 백신은 국가 단위로 구매와 접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WHO 인력양성 허브는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 앞으로 한국은 WHO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선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차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보건 안전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며",
-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향후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정 브리핑 계획

■ 브리핑 개요

- (행사목적) ①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지정(한국) 발표 및 ②mRNA 기술 이전 허브 수혜국(Spokes) 추가 발표(5개국)*

* mRNA 기술이전 허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컨소시움 既지정('21.6.21),
既발표 수혜국(8개): 세네갈,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튀니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추가 발표 수혜국(5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세르비아

- (개최 일시) '22. 2. 23.(수) 23:00~24:00(제네바 15:00~16:00)
- (행사 장소) WHO(스위스 제네바) Executive Board Room
- (참석) WHO 사무총장,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지정국(한국) 및 mRNA 기술 이전 허브 수혜국(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베트남) 대표

■ 세부 일정(안)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시간		순서
한국	제네바	
23:00~23:02('05)	15:00~1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참석자 소개 * WHO Moderator Margaret Harris
23:02~23:07('05)	15:02~1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사무총장 환영인사 - 한국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소개
3~5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허브 지정국 발언 - 권덕철 장관 인사말씀
1인당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NA 기술 이전 허브 수혜국 장관 발언(4~5명) - 인도네시아 외교·보건부장관, 아르헨티나 보건부장관, 세르비아 보건부장관, 베트남 보건부장관(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사무총장 마무리말씀
~24: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질의 응답 및 폐회

참고 2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한 WHO 허브

□ WHO는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해 'mRNA 기술 이전 허브'와 '인력 양성 허브' 2가지 허브 추진

■ mRNA 기술이전 허브

- (지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컨소시엄 지정('21.6.21)
 - *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바이오제약기업(Biovac), 바이오벤처기업(Afrigen), 대학연합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참여
- (기능) 백신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및 mRNA 백신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역할

○ (수혜국 지정) 총 13개국(아프리카 6, 남미 2, 아시아 4, 유럽 1)* 지정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21.9.21) /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튀니지('22.2.18) / (아시아·유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세르비아('22.2.23 예정)

■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 (지정) 한국 단독 지정('22.2.23)

○ (기능)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mRNA 기술 이전 허브'와 그 수혜국만이 아니라 중·저소득국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기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261.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 2022.2.24.